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auri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동네생활권 개념 도입을 통한 근린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장민영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형 놀이자원망 구축 방안 연구	강현미
	역사문화공간 보존·활용 사업의 지역파급효과 분석방법 연구	방보람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정책방향 재정립 연구	임유경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한 생활권 단위 공간계획 모형 연구	남성우
	보편적인 주거수준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기준 정비방안	김상호
	소멸하는 농촌마을 공간관리 도입방안 연구	여혜진
	탄소중립 실현 및 폭염대응을 위한 도시 가로녹지계획 연구	김영지
	공유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건축도시공간 대응방안 연구	허재석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연구	권영란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김영하
	신산업 건축을 관련 규제 개선방안	이주경

기본과제

1 동네생활권 개념 도입을 통한 근린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디지털 전환과 뉴노멀 시대의 진입은 여가, 소비, 교육 등 삶의 방식이나 기준 등을 변화시키며 실제 도시공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근거리 동네 안에서 일상생활을 즐기는 '로컬택트(localtact)'와 '동네화' 경향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일명 '슬세권'이라고 하는 집 주변 생활환경에서의 먹거리나 즐길 거리, 놀 거리, 일거리 등을 누릴 수 있는 동네 인프라와 생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네 기반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하이퍼로컬 서비스 확산 추세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기존의 지리적·행정적 지역 구분방식은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의 규모나 현안, 구체적 장소, 소규모 공동체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하이퍼로컬 동네 단위의 접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변화하는 도시공간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유연한 공간계획을 마련하고자 도보 자족형 근린생활권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근린 단위의 도시계획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n분 도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적 범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시정책 전환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및 하이퍼로컬 서비스 확산에 따라 변화된 지역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동네 단위의 공공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화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응할 수 있는 동네생활권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동네생활권 단위로 공급해야 할 생활서비스 범주를 도출하고, 실제 근린 단위에서의 생활서비스 공급유형 및 범위와 주민들의 이용패턴을 교차 검토하여 하이퍼로컬 서비스 영역과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동네생활권 기반의 근린재생 지원방안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

네생활권 개념의 도입 방향을 제시하고, 동네생활권 단위의 생활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제와 주민참여체계 개선 방안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밀착형 근린재생 정책 및 사업추진방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장민영

2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형 놀이자원망 구축 방안 연구

놀이는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전인적 발달에 필수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들은 학습 부담으로 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삶의 만족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제한 여건에서 빈곤아동의 학습·여가·휴식시간이 줄고 게임시간이 증가하는 현상은(이시호, 2020),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적 교류와 놀이 활동을 보장하는 공공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놀이는 아동의 선호와 양육자의 허용 및 지원, 근린 환경과 사회적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활동이므로 놀이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놀이의 영향 요인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필요하다. 영국은 2008년 국가 차원의 '아동놀이 정책의 핵심 기구'인 PLAY ENGLAND를 수립하고, 아동 놀이 기회 및 자원 개선을 목표로 ▲모든 아동에게 놀 수 있는 공간·기회·시간 제공 ▲아동친화적인 근린환경 조성 ▲놀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차 아동 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 '아동 놀이 시간과 공간 확충 및 아동친화적 놀이·여가환경 조성'을 중점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놀이혁신 선도사업(보건복지부)을 통해 지역사회 주도의 아동 놀이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놀이터를 비롯한 아동 놀이 공간의 조성 및 관리 업무가 다양한 부처로 나뉘어 있고, 지자체의 놀이 공간 개선 사업 대부분이 개별 시설 위주로 추진되어 지역의 놀

이 자원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놀이터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단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점단위의 놀이 공간 공급과 관리만으로는 놀이기회 격차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근린 내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놀이 기회를 제공하는 놀이자원망의 개념과 요건을 제시하고, 근린·도시 단위의 놀이 공간 공급 현황 및 이용 실태를 진단하며,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을 통합·연계하여 놀이 공간 부족 지역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아동의 놀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놀이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강현미

3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지역파급효과 분석방법 연구

건축·도시, 문화재 분야에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과 '역사문화자원 특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범정부 차원에서의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공간이 지역경쟁력 요소이자 지켜야 할 존재로 인식되면서 국가·지자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문화공간의 보전·활용보다 철거·개발이 가치 우위로 받아들여지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부동산 투기요인으로 인식하는 등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는 실제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와 지역 사회 영향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함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문화공간 사업 선정을 위한 조사·평가와 유사사업에서의 실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추진 이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및 진단체계가 희박한 실정이다. 따라서 역사문화공간 정책 추진 동력 확보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실증적 효과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특성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분석 방법(안)을 도출하고 실제 사업 대상지에 시범적용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국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효과 분석 방법과 사업효과 분석방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지역민 공감대 형성 및 자원확보를 위한 실증적 근거 마련과 실효성 있는 사업관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방보람

4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정책방향 재정립 연구

2007년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13년에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 조성 시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2019년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은 더욱 확대되었고, 2021년에는 1,000여 건에 이르는 설계공모가 시행되었다. 이는 2014년 대비 4배가 넘는 수치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설계공모는 약 4,400건에 이른다. 많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설계공모 제도가 기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설계공모 이후 설계와 공사 등 공공건축 생산과정이 합리적으로 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제도 변화로 설계공모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공모 이후 설계 및 공사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은 미흡하였으며, 당선 이후 빈번한 설계 변경이나 공사 과정의 설계의도 구현 미흡 등의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설계공모가 과연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설계공모 이후 설계 및 공사 단계의 사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공공건축 생산과정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유경

5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한 생활권 단위 공간계획 모형 연구

바야흐로 21세기는 탄소중립의 시대이다. UN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은 탄소중립을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며 파리협정에 따른 1.5℃ 온도 상승 억제를 실천하기 위해 저탄소를 위한 발전전략(LEDs)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고 실행 전략들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건물과 도시공간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전략으로서 2021년 말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건물 32.8%와 수송 37.8% 등의 탄소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건물과 도시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주공간이자 일터이며 인간의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이어서 ▲건물은 제로에너지화 ▲국토와 도시는 수소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자립, 녹지 확충,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등 탄소중립 공간을 조성·확대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다.

건물과 도시공간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포함한 공간 단위에서 탄소중립 도시조성 전략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을 고려한 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개발 업무지침'의 개편(2021년 말)은 이와 결을 같이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탄소중립 전략을 생활권 공간 단위에서 구현할 수 있는 계획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생활권 단위는 커뮤니티·마을 단위에서 지구단위 계획·도시개발사업 단위의 규모로 가장 효과적이고 실

천적인 공간 모형이 제시될 수 있는 범위이다. 이러한 생활권 단위에서의 기존 도시개발과 탄소중립 도시개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공간 계획 요소와 기술들을 도출함으로써 이를 적용한 최적의 공간계획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과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화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남성우

6 보편적인 주거수준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기준 정비방안

2021년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단기적인 주택공급 확충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보급률과 1인당 주거면적 등 양적 지표의 개선과 별개로 주거수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설비조차 갖추지 못한 주택의 비율이 4.2%에 이르는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소규모(소형) 공동주택에서 두드러지는데 「주택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경우 구조·설비·부대복리시설 등에 관한 별도의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지만 기숙사·고시원·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이나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규모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성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부재하거나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청년·사회초년생·저소득층 등의 주거시설로 많이 이용되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축기준을 운용하고 있지만 최소 규모와 구조기준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안전 및 환기성능 등 생활공간으로써 갖춰야 할 보편적인 주거성능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의 기틀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2인 가구 및 청년가구 등이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소형)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실태 파악 및 보급 확산 원인 진단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형별, 규모별 건축 관련 기준 적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적정 품질 확보를 위한 건축 관련 기준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소규모(소형) 공동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국가 인구 및 주택정책의 방향설정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상호

7 소멸하는 농촌마을 공간관리 도입방안 연구

농촌은 우리 국토의 83.3%(2018)에 달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2020년 5월 기준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읍·면의 약 85%가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며 역내 모든 읍·면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공동화가 지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 농촌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의 상업지역보다 많은 112개 용도가 허용되어 개발압력이 높고, 정부 및 지자체의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 시책이 추진될 때마다 개별입지 공장·축사·신재생에너지시설·쓰레기처리시설 등 각종 시설의 입지규제 완화, 개발 인센티브 부여 등 수차례 규제강화와 완화가 누적되면서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촌 주민의 생활환경과 농업생산활동에 대한 누적적 환경침해, 농촌 고유의 경관적·생태적 가치 훼손은 법적·사회적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성장관리제도를 통한 공장입지 규제와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한 농촌 위해시설의 이전 및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토지이용계획 이론에 기반한 현행 토지이용관리제도는 도시 토지이용의 입지 개념을

농촌 토지이용에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용도지역제로 허용된 토지이용 간 경합을 조정하거나 입지를 배제할 수 있는 입지 조정기능이 매우 부실하다.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지구는 신규 개발수요에 초점을 둔 사업지구형 위주이고, 규제지구는 포괄적 행위규제로 실질적 관리 기능이 취약하여 현재 농촌지역 토지이용의 집합적 조정·관리 필요와 미스매칭한다. 또한 농촌공간이 갖는 생산공간, 생활공간, 자연공간이 혼재되고 공존하는 공간적 정체성이 도시공간과 차별화된 계획적 관리를 요구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농촌 토지이용의 미시적, 집합적, 입지 및 행위규제를 위한 농촌 용도지구 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촌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쟁점에 대응하는 용도지구 유형과 유형별 입지 및 행위규제 요소 체크리스트를 제시함으로써 농촌지역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혜진

8 탄소중립 실현 및 폭염대응을 위한 도시 가로녹지계획 연구

최근의 여러 기후변화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의 1.5℃ 상승은 예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표적인 이상기후 현상인 폭염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이에 도시열섬 현상이 함께 나타나 이전보다 더욱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무더운 도시환경이 도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더위를 피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 증가, 승용차 이용 증가 등은 탄소중립 달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더운 도시환경은 보행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보행자는 직사광선과 높은 기온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높은 열스트레스가 축적되며, 이는 특히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한다. 또한 보행

자의 외부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개인차량의 이용을 증가시켜 더욱 더운 도시환경을 만드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보행과 옥외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도시민,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도시 차원에서 외부공간의 폭염대응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로변에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 띠녹지, 건물 앞 조경공간 등의 가로녹지들은 보행자의 열스트레스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주요 자원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같은 관련 법정계획에서 가로녹지에 대한 계획은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특히 지자체의 가로녹지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도로 노선별 가로수 식재 현황(개수, 수종 등) 정도만 파악하고 있어 가로녹지의 구체적인 현황, 진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가로녹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보행자에게 보다 쾌적하고 시원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로녹지 계획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시적인 도시 열환경 현황과 가로녹지 조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획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에 보다 취약한 가로유형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로녹지 계획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가로녹지 계획을 수립·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지

9 공유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건축·도시공간 대응방안 연구

공유모빌리티는 대중교통 연계 및 단거리 차량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퍼스트-라스트마일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과 가치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공유모빌리티의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이용자 간 상충 및 안전사고

문제, 무분별한 주차 및 방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정의와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었다. 이에 공유 전동킥보드 등 공유모빌리티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자전거 인프라가 가지는 한계(연속성, 연계성 등)가 존재하며, 공간 및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설치기준으로 인하여 도로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만을 초래하는 공간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공유모빌리티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대중교통 연계 및 단거리 차량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특성과 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공유모빌리티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이용실태 및 물리적 이용여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물리적 환경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공유모빌리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이동경로의 연속성 및 수단 간 연계성 강화 방안, 안전한 주행을 위한 통행공간 개선 방안, 이용행태와 접근성을 고려한 주차공간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유모빌리티 관련 정책·사례·민원 등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용현황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 및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간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수단과 공유모빌리티의 효율적 연계 및 공존 방안을 제시하고 공유모빌리티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허재석

10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연구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식민지 건축유산의 보전·활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동시에 '근대문

화유산'이 학술용어로 등장하면서 식민지 건축유산은 현재 삶의 공간이자 일제강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물로 인식되는 한편 보전·활용에 대한 반대의견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6·25전쟁과 군부독재정권 등 비교적 가까운 시대와 관련된 건축물이 보전·활용되면서 갈등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보전·활용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대립이 격화되면서 유산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나 보전·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정책이 결정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포함한 건축유산의 보전·활용 의사결정은 관련 전문가 및 정책 결정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보전·활용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경우 사건 당사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기존의 건축유산과 가치 기준이 상이하며, 정책결정 이전에 유산의 보전·활용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 유형에 대한 이해와 유형별 갈등관리의 구체적 방법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고,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청 갈등관리 운영규정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과정에서 유산과 관련 있는 다양한 주체들과 유산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보전·활용 방법에 대해 참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권영란

11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전국적인 도시쇠퇴 대응을 위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은 8년간(2014~2021년) 534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2014년 도시재생사업지로 최초 선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 2016년 선정된 '도시재생 일반지역' 등 초기 도시

재생사업을 중심으로 작년까지 총 37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국비지원이 종료되었으며, 앞으로도 사업종료 지역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시재생사업 종료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쇠퇴지역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에 부족한 행정·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을 공급하고자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다수 공급되었으나, 그간 시설의 '공급'에 초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종료 이후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사업종료 이후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귀속됨에 따라 시설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을 경우 시설이 방치되는 등 거점시설 조성 이후의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행정에서도 제한된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간 운영주체의 참여 등 지속가능한 운영에 대한 해법 마련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계획·조성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 중인 거점시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유형별 운영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중 거점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계획 수립 항목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장기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김영하

을 수립하였다. 도심형 신산업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제조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도시 내에 신산업 지원 시설인 지식산업센터와 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시설 공급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산업 관련 시설에 대한 건축 법제는 미흡한 편이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축물의 규모나 입주 가능 업종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별 기준은 「건축법」으로 다루고 있어 행정 집행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2018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용 시설 중 하나의 용도로 신설되었으나 건축물의 목적이나 구조, 이용행태가 방송통신용 시설과 차이가 있다. 도심형 시설로 조성되어 도시 환경에 영향을 주거나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시설안전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지만 관련한 건축 기준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도심형 신산업 지원 시설에 대한 건축 법제 현황과 조성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산업과 관련하여 도시 내에 새로 공급되고 있는 시설 중 「건축법」 용도체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경우, 각 사업체가 요구하는 시설 특성이 뚜렷하고 새로워 건축 기준 검토가 필요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와 데이터센터 등 도심형 신산업 지원시설이 규명되고 관련 산업 특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건축 법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주경

12 신산업 건축물 관련 규제 개선방안

최근 신산업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를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였다. 2021년에는 정부 최초로 제1차 신산업 정비 기본계획

2022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2월 23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먼저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이주현 기획총괄과장이 '생활SOC 3개년 계획 추진 성과'를 주제로 투자·시설 확충 및 사업혁신,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 분야별 체감성과를 제시하고 3대 분야의 생활SOC 성과지표의 달성 현황을 공유하였다. 이어 건축공간연구원 성은영 연구위원은 '생활SOC 정책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를 통해 생활SOC 정책을 통한 공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지자체 주도적 공급 및 관리·운영 ▲범부처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3가지 측면에서 정책 성과와 한계를 발표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이정목 대외협력담당관 연구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생활SOC 계획 및 사업 추진 사례'를 통해 생활SOC 5개년 계획 및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관련 현황 분석이나 계획 수립을 위해 빅데이터와 연계한 다양한 데이터 생성 및 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로건축사사무소 최재원 소장은 '지역과 함께하는 생활SOC 디자인'을 주제로 생활SOC 디자인 사례인 ▲구산동 도서관마을 ▲풍기읍사무소 ▲영주장애인복지관 등을 소개하였다.

발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등 산·학·연·관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관점에서 생활SOC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다.



AURI 마을재생 포럼

'넥스트 도시재생: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월 27일(목) '넥스트 도시재생: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을 주제로 AURI 마을 재생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원도심을 대상으로 지역 청년의 정착을 통한 활성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남원시와 함께 여러 전문가가 모여 로컬리즘 기반의 지방 중소도시 재생의 실행방안과 지향점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로컬 플레이어'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장민영 부연구위원이 '로컬 플레이어, 청년의 지방이주와 실험적 정착'에 대해, 박주호 (주)로모 대표가 '10년 후 로컬을 위한 중소 앵커기업 육성'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로컬 신'을 주제로 윤주선 부연구위원이 '방법에서 방식으로: 길바닥 연구자의 길', 개항로프로젝트 이창길 대표가 '지역 고유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개항로프로젝트'를 각각 발표하였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로컬리즘'을 주제로 한 마지막 주제 발표는 서수정 선임연구위원의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방향'에 이어 김정태 mysc 대표의 '도시 재생의 다변화와 협업: 스타트업, 임팩트 투자, 그리고 사회혁신'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민영 부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발제자들과 함께 로컬리즘을 기반으로 중소도시재생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auri

2022 AURI 마을재생 포럼

넥스트 도시재생

남원시 빨간벽돌 2층
온라인 생중계 auriTV

로컬리즘 기반의

2022. 01. 27(목) 14:00 - 17:20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마을재생센터장 박주호, (주)로모 대표
윤주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길, 개항로프로젝트 대표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태, MYSC 대표

중소도시 재생

(auri)

2021 아시아 도시경관상 국내 수상작 시상식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1월 20일(목) 대회의실에서 '2021 아시아도시경관상(Asian Townscape Awards) 국내 수상작 시상식'을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하였다.

아시아도시경관상은 아시아인에게 행복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자 2010년부터 타 도시의 모범이 되며 성과를 이룬 도시와 지역, 사업 등을 선정하여 시상해 왔다. 건축공간연구원은 2020년부터 유엔 해비타트 후쿠오카본부,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 아시아 해비타트협회, 아시아 경관디자인학회와 함께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총 24개 작품을 예비심사 대상으로 접수했으며,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중국과 홍콩·인도네시아·일본·한

국에서 총 11개 작품을 선정하였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는 '양천공원'(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금빛수로'(김포시청), '서울경관기록화 사업'(서울특별시청), '삼각지마을'(영주시청)이 각각 본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국내 수상작 시상식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국제 시상식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국내 수상작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한편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는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통해 국내 우수 경관 사례를 발굴·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일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2021 AURI 우수 연구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월 24일(월)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AURI 우수 연구 시상식 및 발표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하였다.

이번 시상식은 2021년 한 해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중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해 대상(2건) 및 우수상(3건)을 수여하였다.

먼저 대상은 공동 수상으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임유경 연구위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자원 활용 체계 구축방안(변은주 연구원)'에게 수여되었다. 우수상은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연구(고영호 연구위원)', '지속가능 보행도시조성지원사업(한수경 부연구위원)', '제2차 건축자산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염철호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수상하였다.

이외에도 논문상에는 박유나 연구원이 '침입범칙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공간 특성에 대한 연구 외 4건'으로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이후 마련된 발표회에서는 수상자 대표로 나선 과제 책임자가 주요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연구 수행 과정에 필요한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축공간연구원은 3월 18일(금)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시·건축 주요 기관들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는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조경학회 등 8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자료수집) 도시 및 건축 자료 기증·대여, 복제품 제작 등 자료 확보 협력 ▲(운영협력) 후원·인적교류·시설지원 등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전시홍보) 전시 자문 및 연계 프로그램 등 콘텐츠 지원, 협약기관 전시시설 지원 및 특별전 등 홍보사항 발굴 등이었다.

한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존, 전시, 교육 및 연구의 중요한 거점시설로 기획되었으며 향후 전시 소장품 수집과 함께 자체 콘텐츠를 구축 및 생산하는 '생동하는 박물관'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설계공모 당선작(2020)
출처: 국토교통부. (2022).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성공적 건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한다. 3월 22일 보도자료.

건축공간연구원-(사)한국사회주택협회- 재단법인 동천 업무협약 체결

건축공간연구원은 3월 25일(금) 서민 주거복지 향상과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사)한국사회주택협회와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사무처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 사회, 주택 등 환경변화에 따른 서민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문화 구현 관련 주택 정책 연구 ▲사회주택과 관련한 기존 사업 평가 및 제도 개선, 법제화 방안 등 연구 ▲주거복지 및 주거문화 관련 학술활동 개최 협력 등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협약식에서는 다양한 주택 공급과 운영체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언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먼저 최경호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의 '사회주택 현황과 과제',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주택 연구 추진 방향',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의 '사회주택 법률지원, 제도 연구 및 출판 계획' 순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향후 세 기관은 서민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문화 구현을 위해 이슈 발굴, 제도개선, 정책개발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협력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